



김종조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이(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 조합원 900여 명)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 이후 반년 만에 투쟁에 나섰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38년 역사상 첫 파업이다. 그간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20퍼센트 인상, 주 5일제 시행, 시차근무 폐지, 불법파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는 대구의 대학병원 중 임금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받은 기본급이 110만 원이었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 입사한 친구는 15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입사 첫해에 받은 월급과 입사 10년차 선배의 월급 차이가 20만 원밖에 안 났어요. 임금 인상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해요.”

외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시차근무’ 때문에 매우 불규칙하게 근무해야 했다. 병원 측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 일을 시킨 것이다.

시차근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한 시간은 다른 날에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 연장근무 수당도 안 줍니다. 출근하다가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는 일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을 앞서 보여 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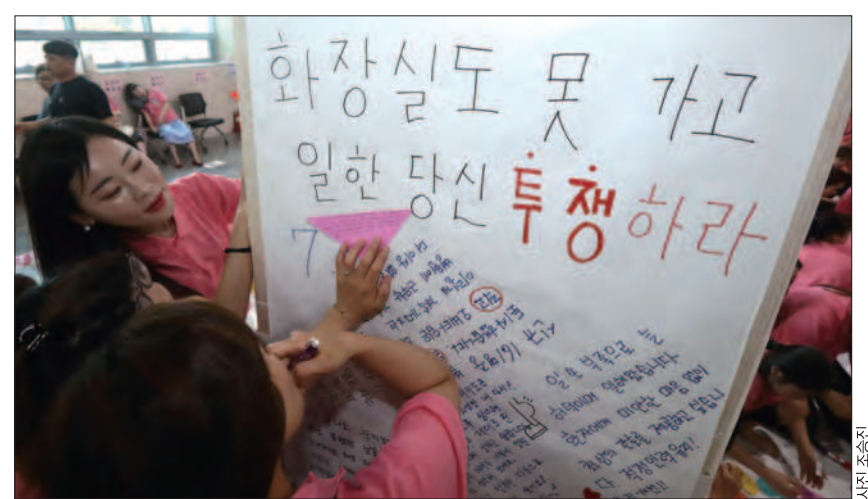
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병원은 큰 이윤을 얻었다. 2015년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흑자 171억 원을 기록해 지역 상급종합병원 16개 중 수익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챙겨온 병원 측은 노동자들을 천대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직원 식당도 없어요. 반면, 외대 교수들을 위한 전용 식당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얼마 전 의사들의 월급은 우리 모르게 44퍼센트나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은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안전도 안중에 없이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



김종조 기자

을 강요해 왔다.

“시간외근무 인정해 달라고 하면 환자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지금 퇴근하래요. 가톨릭 재단이라고 걸으려는 생명 존중을

내세워도 이런 걸 보면 도무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지난해 12월에는 병원 측이 노동자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것이 폭

▶ 2면으로 이어짐



계속되는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
발전사 비정규직, 철도 비정규직,
한국잡월드, LG유플러스

3면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한국역사상 최대 규모
여성 행동

4면

올여름 폭염과
자본주의

2면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

2면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부가 발표한 사례만 봐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정부청사관리본부 파견·용역 노동자 2435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직무급제를 도입해 처우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노동자 3750명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최하위급의 기본급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고작 3퍼센트 높다.

정부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조건 개선에 대한 열망을 담아 차별 해소를 요구해 왔다.

더구나 정부가 추구해 온 자회사 전환 방식은 직접 고용보다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용이해 고용 안정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차별 정당화

또, 정부는 표준적 임금 모델을 정해 놓으면 사용자들이 자의적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의 이면에는 정부가 제시한 그 표준적 기준이 비정규직을 낮은 직무로 묶어 두고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진실이 숨어 있다.

표준임금모델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급 임금체계라는 정부의 주장도 위선이다. 실상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고, 호봉제 도입 등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요구를 억제하려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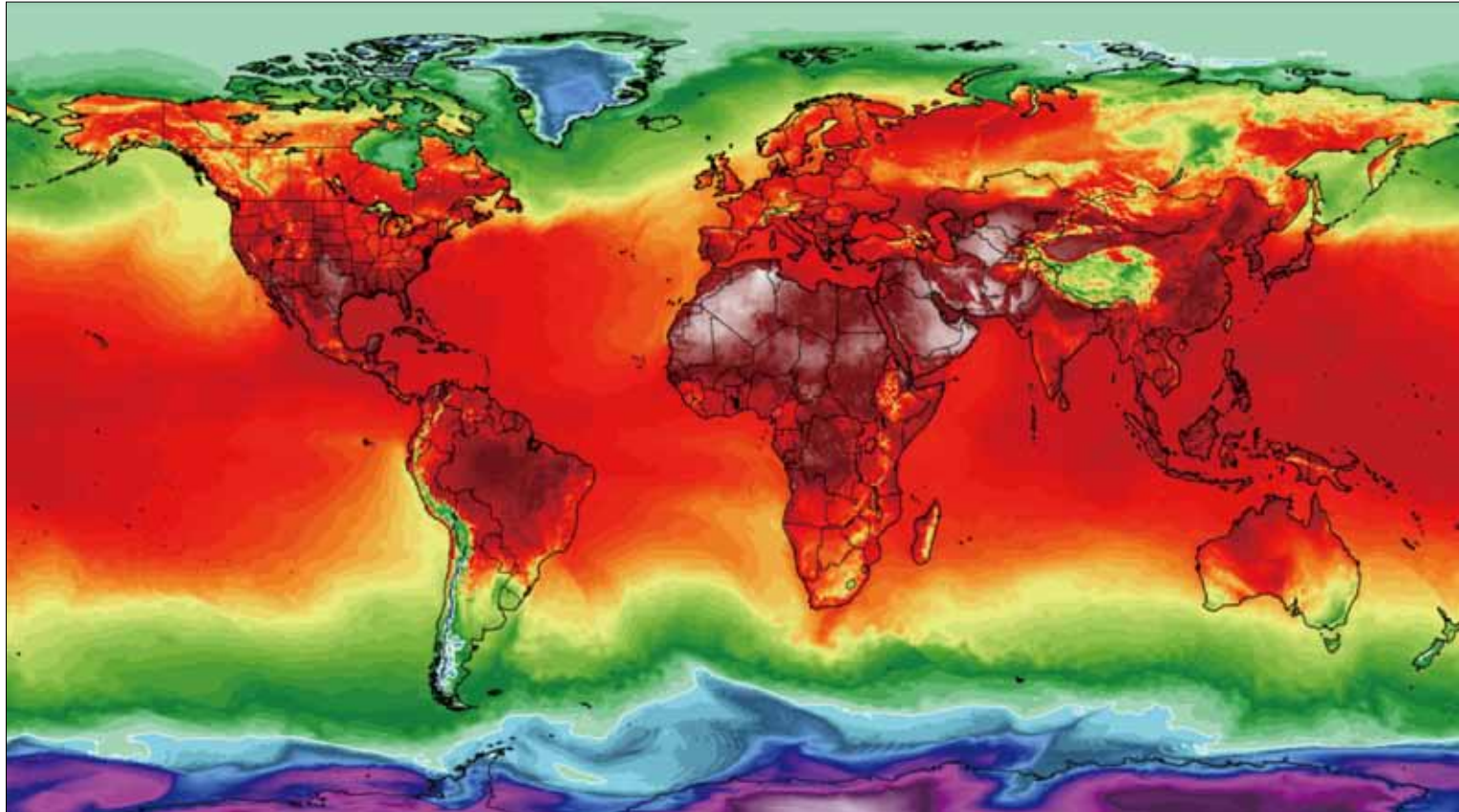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정하려면, 임금을 대폭 올리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표준임금제 도입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과 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표준임금모델을 확대해 공공부문 전체에 임금 억제 정책을 확대해 가려는 것이다. 이는 또 민간부문의 임금체계 개악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표준임금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연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정원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여름 내내 계속되는 폭염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면 장차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헛웃 보여 주고 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폭염이 5월과 9월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상 1년 중 절반이 여름이 되는 셈이다. 그는 “기후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이 있어 매년 다르긴 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분명한 점은 폭염이 한반도에 점차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은 분명히 온난화”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10년부터 2017년까지 여름(일 평균기온 20도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간이 꾸준히 늘었다. 최근의 폭염은 이처럼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과 맞물린 것이다.

이전까지 기후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갈수록 그러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중동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상이변이 늘어 왔다. 올여름 한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최고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웠듯, 아프리카에서도 7월에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44도까지 올라 40여 년 만에 최고 폭염이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장차 강수량이 크게 줄고 그 결과 토양 질이 저하돼 2050년까지 5000만~7억 명이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남아시아, 이라크 남부, 아프가니스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뿔’(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역에서는 “날씨가 가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그 때문에 이미 가난한 지역사회들이 그나마 가진 것도 잃고 그래서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빈도는 40년 전의 다섯 배로 늘었다”고도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다른 요인들과 맞물린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아프리카는 제국주의 약탈에 시달렸고, 독립을 이룬 뒤에도 세계적 부자들과 현지 부자들을 위한 개발 탓에 환경 파괴를 겪었다.

그리스에서는 외채를 갚기 위한 가혹한 긴축 정책으로 삼림 관리(건조한 날씨 탓에 저절로 화재가 나기도 한다), 소방서, 병원과 응급실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결과 올해 대형 산불로 80명 이상이 숨졌다.

온열질환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5일까지 폭염 때문에 올해 적어도 40명 가까이 숨졌고, 전체 온열질환자는 33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야외나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체 온열질환자 셋 중 한 명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7월 한 달 동안 언론보도로 알려진 폭염 산재 사망자만도 4명이나 된다.

일각에서는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지적한다. 폭염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전력계량기 눈금에 마음을 줄여야 하는 처지

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너무 늦었고, 그마저도 알량한 수준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주거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 완화가 무분별한 전기사용을 부추겨 기후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 대부분의 전기는 산업에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 기업들이 부담을 늘려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 애먼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기요금도 그 일환이다. 야외나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투쟁은 이윤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조금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온갖 핏수를 파업 대오를 흔들려 애쓰고 있다. 교육부 감사에서 기본급에 포함하라고 지적받은 특별상여금을 임금 ‘인상안’이라고 포장해 내놓기도 했다. 파업이 지속되자 병원 측은 특별상여금은 따로 지급하고 5.5퍼센트를 온전히 인상하겠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수준에 만

족하지 못한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에서 승리 아니면 사직입니다.”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가자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8월 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병원 앞마당에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연대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있다.

“늘 부당함을 당해도 혼자 앓다가 끝났는데, 이렇게 한마음이 되니까 참지 않고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좋아요.”

“병원은 체육대회, 각종 행사 때마다 반 강제로 참여시키면서 병원을 위해 단결하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단결하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줍시다. 우리가 이 병원의 주인입니다.”

“파업을 하니까 전국에서 힘을 보내줬어요. 연대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연대해 주니 힘이 났고, 이런 게 노동자의 힘이란 걸 알았습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착취와 천대에 맞선 투쟁이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지태·장호중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가 말한다

발전사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저희는 정규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규직 2200여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2200여 명, 총 4400여 명이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같이 '예외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전소 용역 노동자들이 매일 죽어 나갑니다. 그동안 34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337건(97퍼센트 이상)이 용역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용역계약 계약요건'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청회사와 원청회사가 용역계약을 하는데, [하청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갑점 요인이 돼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청회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은폐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의 실태조사[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벌금으로 마무리 합니다.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지요. 솜방망이 처벌으로 노동자의 아픔과 근로조건 개선이 없는 상



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밥값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3500원, 비정규직은 4500원. 비정규직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또 점심시간도 달리 지정합니다. 정규직은 11시 30분, 비정규직은 12시.

저녁시간에는 배달이 안 돼 라면이나 즉석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발전소에는 '계획예방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169시간에서 많게는 213시간의 연장·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급이 대부분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장근무가 전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아직 노동의 적폐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발전사들은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밀접한 발전소의 미



정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가야 한다

세면지를 저감하는 시설의 용역 노동자들이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면, 전력을 생산하는 그 주체가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것이 생명안전 업무일까요? 정부와 발전사에 되물고 싶습니다.

[정부와 발전사는] '화력발전소는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저희는 화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일 것입니다.

발전사는 저희들의 정규직 전환 요

구 투쟁에 깨알 같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는 채증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처분한다',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적·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저희가 이런 발전5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적폐 모습에 발전사에 맞서 4200여 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한 번 돌아봐 주신다면,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직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논란 끝에, 철도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전문가 실사를 하기로 했다.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8월 말 실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 넘게 끈질기게 싸워 180여 명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되는 성과를 얻었다. 양승태 사법 농단이 폭로돼 사회적 초점이 된 것과 맞물린 결과이기도 했다.

KTX 승무원 승리

KTX 해고 승무원들의 승리는 사측이 생명안전 업무 기준을 들이밀며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제외한 것이 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핑계였음을 보여 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했고, 자회사 소속이었다.

열차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승무원은 협업하면서 함께 사고에 대처하고 안전 업무를 실행한다. 다른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도 철도 운행에 필수적이고, 과거 정규직이 수행했던 일이 대부분이다. 이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야 한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지난 6월 하순 사측과 체결한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자아냈다. 전체 비정규직 중 15퍼센트만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전부 제외됐을 뿐 아니라 처우 개선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 집회와 청와대 행진,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철도노조 지도부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말한 대로 투쟁하길 바란다. 특히 철도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은영

직접고용 위해 싸우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 설립된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췌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잡월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지난 4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한 전환 방안을 밀어붙였

다. 6월 취임한 새 이사장도 “노사전문가협의회 과정이 민주적이었다”며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했다.

노동자들은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월 18일 한국잡월드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7월 내내 청와대와 노동부 앞 집회를 했다. 8월 7일 열린 결의대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계속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희망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이제 거짓 희망

은 믿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희망만 믿겠다. 우리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하자!”(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여러 노조들이 연대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 등 수십 개의 노조 대표자들이 줄지어서 투쟁 기금을 전달했다. 정부와 사측의 기만에 맞서 싸우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강철규



사진 포커스

“진짜 사장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LG유플러스 노동자들 외치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8월 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햇볕 가림막도 없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도 활력과 투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임금 떼먹기, 고용불안 조장, 열악한 노동조건 강요 등에 분노를 토하며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진



불법촬영(몰카) 항의 운동

여성 천대에 항의하는 최대 규모 대중 행동

지난 5월 이후 네 차례 집회에 연인원 17만여 명의 여성들이 '몰카' 항의(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과 미온적 수사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가했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에서도 여성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고 거듭된 시위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분노와 요구에 전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주로 노동계급과 서민층인) 젊은 여성들의 놀라운 분출 뒤, 디지털 성범죄의 끔찍한 실태가 계속 조명받고 있다.

7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된 비극적 사례는 왜 여성들이 분노하는지 잘 보여 준다. 전문업체에 거액을 주고 불법촬영 동영상 삭제를 의뢰했지만 동영상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자살한 여성의 사연이 그것이다. 끔찍하게도, 해당 영상은 피해자 자살 뒤에는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됐다고 한다.

몰카 범죄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것도 새삼 확인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한 '전문 기사꾼'(헤비업로터)는 한때 하루 22시간 동안 10여 곳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올렸는데, 경찰 단속으로 고작 벌금 5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디지털 성범죄

SBS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 확산이 기업들의 돈벌이 노력과 관련 있음도 드러냈다. 국내 웹하드 업체들이 전문 기사자들을 경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고, 필터링(특정 내용물을 걸러내는 일)·디지털 장의사(돈을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일) 업체와도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정황을 보여 준 것이다.

이 방송이 나간 뒤에 여성들의 분노가 다시 치솟고 있다. 당연하다. 방송 다음 날 청와대 국민 청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이를 만에 6만 명이 동참했다. 8일 정도 지난 현재 8만 명에 육박했다.

2015년 소리넷 폐쇄 운동이 일어난 이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가들은 불법 촬영물 핵심 공급자의 하나로 국내 웹하드 업체를 수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모두 소극적이었다. 활동가들이 증거를 직접 수집해 신고했을 때 경찰은 오히려 이들을 타박했다.

방통위는 2016년 5월에야 처음으로 웹하드 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가 합쳐서 겨우 1470만 원에 불과했다. 웹하드 업체가 파일 중개수수료로 매년 올리는 매출이 수백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깍깍'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는 기업들의 성범죄 행각을 방치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 큰소리치



여성들의 직접 행동이 거리를 달구다 8월 4일 광화문에서 열린 불법촬영 항의 시위

며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도 웹하드 업체 등의 기업 규제책은 별로 없다. 인터넷 사업자가 몰카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에 내리는 조처는 '시정명령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했다.

'몰카' 항의 운동은 이런 현실, 특히 수사 당국의 소극적 수사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 것과 국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적극 나설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방치

이 운동이 커지자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3차 집회 직전 경찰은 몰카 범죄를 사이버 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10월부터 가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필요한 조처들이지만 이것들로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널리 유통되게 만드는 기업들을 단속·처벌하는 조처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민간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

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여성을 천대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이 운동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하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여성들이 직접적 대중 행동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다.

또한 폭발적으로 분출한 운동의 밑바탕에는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전반에 대한 항의도 깔려 있다. 몰카 범죄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부패한 사회의 증상이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두 이 운동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에 항의하려면, 여성들은 대중 투쟁을 통해 힘을 보여 줘야 한다. (개혁신의자들의 성평등 연사로는 불충분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진정한 힘을 보여 주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만이 실질적 양보를 성취할 수 있는 동력이다.

'생물학적' 여성뿐 아니라 시위의 목적과 목표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그 힘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정진희



행동에 나선 여성들은 스스로 역사를 바꾸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폭염에도 7만 명이 모인 '몰카' 항의 광화문 집회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4차 시위가 8월 4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최악의 폭염에도 휴가철인데도 주최 측 추산 7만 명이 모였다. 광주·대구·대전·목포·부산 등에서도 여성들이 버스를 대절해 참가했다.

3차 집회 뒤 친문 인사들과 언론이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이 운동 참가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 등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3시간가량 지치지 않고 집회를 이어 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여전히 높았다. "자칭 페미 문재인은 응답하라", "페미 공약 걸어놓고 나 몰라라" 등 문재인 비판 구호가 선창될 때, 참가자들의 호응이 특히 컸다.

4차 집회 직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업체와 불법촬영자 사이의 유착에 대한 분노도 컸다. '전문 기사꾼'들이 '몰카'로 수익 원석 더러운 돈을 벌고도 겨우 벌금 5만 원을 내는 현실을 비꼬는 재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손수 만들어 온 팻말들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너희의 성적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다",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포주 국가 방치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몰카범죄 방관하는 사

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와 투쟁성으로 여성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이 드러나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위대한 혁명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4차 집회는 마지막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고위직에 여성 임용 확대, 경찰대 입학과 경찰 채용에서 여성 비율 9:1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은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사용할 말이 아니"라며 실질적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와 법무부 등도 '몰카' 근절에 더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보장할 가치가 없다"며 대표적인 여성 비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폐쇄를 통째로 요구했다.

사회자는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집회에는 10만 명이 모이자고 호소하자 참가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여성 천대에 맞선 여성들의 대중 행동은 계속돼야 한다!

양효영